

중소업계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동결” 입법 촉구

‘노동현안 입법’ 국회에 본격 압박
기업 ‘지불능력’ 기준에 추가하고
최저임금 일정기간 동결 등 요구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1~2월 공전을 거듭한 국회가 3월에서야 본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교통정리를 해줘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일정기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연장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로 확대 등의 내용을 관련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안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왼쪽부터)성창진 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심대용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이동익 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임병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중기단체협의회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가

두루 속해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는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내용을 법에 포함시켜 업종별 구분 적용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해야 업종별·규모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까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이들 기업의 경우 10곳 중 3곳 정도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협의회는 또 ‘근로자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돼 있듯, 임금을 주는 기업의 ‘지불능력’도 기준에 추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는 전문위원 외에 노·사·공익(상임위원)을 1명씩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지금대로

라면 구간설정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이 전문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무조건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위원 형태를 통해서라도 구간설정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법에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재량근로 등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일부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많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가 이참에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노사정합의를 통해 6개월로 가다가 잡혔지만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를 최대 1년까지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현재 1개월인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향후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주유소와 홈픽 차량. /SK이노베이션

‘기름 넣는 곳’ 주유소의 변신 택배·편의점으로 불황 극복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 발굴 사활
소비자 체류시간 늘려 부가 수익

국내 정유업계가 주유소를 ‘기름 넣기 위해 드리는 곳’이 아닌 ‘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을 중심으로 휘발유 생산이 급증하며 유례없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정유업계가 주유소라는 거점을 활용해 기존 사업과는 다른 신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며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OIL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하이웨이주유소에 국내 주유소 최초로 무인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오픈했다.

S-OIL의 무인편의점은 최첨단 IT 기술이 적용돼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주유소에 방문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들여 ‘카เฟ่형’ 콘셉트로 구축했다.

출입문에는 통합인증단말기가 설치됐다.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엘포인트 멤버십 총 3가지로 인증해서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전자가격태그, 고화질 CCTV, 유인/셀프 복합 듀얼 POS, 직원 호출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신동열 S-OIL 국내영업본부 부사장은 “계열사 주유소의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부대사업 아이템 발굴은 물론 효율적인 주유소 운영 개선을 위해 마케팅플

랫폼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를 거점으로 택배서비스를 활용하는 신사업도 확장되고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지난해 물류 스타트업 ‘쭈마’와 손잡고 C2C 택배 서비스 ‘홈픽’을 선보였다. 4월 중순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 8월에는 전국 단위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어 9월에 정식으로 론칭했다. 양사는 5:5의 비율로 전국 약 600여개의 주유소를 택배 집화 거점으로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든 1시간 이내 방문 픽업”이라는 서비스 특화 전략에 힘입어 일 최대 주문량이 5000건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C2C 택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물량을 취급하는 개인고객 입장에서 택배를 접수하는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컸다”며 “개별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단 시간 내에 많은 고객을 유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양사는 지난해 말 주유소 기반 스마트 보관함 서비스 ‘큐부(QBoo)’도 공동 론칭했다. 큐부는 고객이 주유소 내에 설치된 스마트 보관함을 활용해 택배 보관, 중고물품 거래, 세탁, 물품 보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비즈니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産團 내 숙박시설 허용’, 정부 “안돼”로 일관

호텔 외 숙박업소 허용 개선 목소리
정부 문턱 못 넘은 현장 규제 수두룩

‘산업단지엔 호텔엔 되는데 여관 등 숙박업은 안된다?’

충북의 한 산업단지엔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야근 등이 불가피할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산업단지내 호텔에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늦은 밤에 왕복 2~3시간이 걸리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산업단지엔 호텔이 아니면 다른 숙박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법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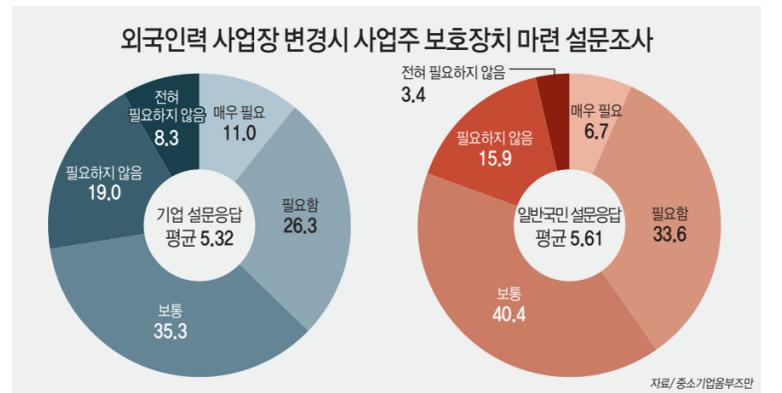
실제 현행법에선 산업단지에는 객실 30인 이상이면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인한 관광호텔업만 허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밖의 먼 거리에 있는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심지어 산업단지 내에서 여관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일부에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숙박시설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는 관련이 적은 등 지원시설구역 취지에 부합치 않아 ‘수용불가’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현장에선 개선 요구가 빗발치



고 있지만 법이나 규정 등의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규제는 한 돌이 아니다.

▲연구·개발 중소기업 선박폐기물 활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설치대상 확대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휴게음식점 허용 ▲산단관리기본계획 업종별 공장 배치사항 삭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기준 현실화 ▲외국인력 사업장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등도 현장에서 건의해 검토됐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6~8일 사이 중소기업 300곳, 일반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세부 과제별 규제 개선 필요성 및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를 조사해 13일 내놓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32개 세부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55.8%, 국민은 48.4%가 개선 필요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각각 12.1%(중소기업), 14.6%(국민) 뿐이었다.

특히 산업단지내 숙박시설 입주자격 확대,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휴게음식점 허용,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시 구비서류 축소,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등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도 꼽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부 등 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1월 시중통화량, 1년 만에 증가세 ‘최대’

지난 1월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1월 광의 통화(M2)는 2725조5000억원(평잔·계절 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1월(1.4%)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M2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현금을 비롯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와 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상황된 기업자금이 재조달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됐다.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다.

다만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지난 2017년 9월 이후 상승흐름을 지속했으나 1월에는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축소되면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됐다.

/김희주 기자 hj99@